

한-카자흐 정상, 전략 동반자 확대 공동성명 채택

문 대통령,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사의 표명

우주·보건의료 협력 강화... 기후변화 등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빈 방한 중인 카심-조미르트 토크야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 관계 발전과 실질협력 확대 방안 한 반도 중앙아시아 평화·번영 협력 등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2층 접견실에서 토크야예프 대통령과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을 가졌다. 토크야예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을 방문한 첫 외국 정상이다.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과 연계해 국빈 방한했다.

이날 정상회담에는 카자흐스탄 측에서 선 무흐타르 트레우베르디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 로만 스크르보 경제부총리, 누르ullan 노가예프 에너지부 장관, 무랏 누르틀레우 대통령실 국제관계 부실장, 티무르 슐레이베노프 경제관계 부실장, 바티르 슈엔베코 주한카자흐스탄 대사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정외무 외교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훈 국가인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구홍석 주카자흐스탄대사, 김형진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토크야예프 대통령에게 카자흐스탄 독립 30주년을 축하했다. 코로나19 이후 맞이하는 첫 외국 정상 방문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두 나라간 각별한 우정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토크야예프 대통령 방한과

함께 이뤄진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두 나라 사이의 특별한 인연을 되새기고 우의를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토크야예프 대통령은 2019년 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시례를 환기하면서 이번 답방으로 두 나라 간 우호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1992년 한·카자흐스탄 수교 후 30년 간 정치·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온 것을 평가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최대 교역국이자 부자진출국이다. 2019년 교역액이 42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 15억 달러 규모였던 교역액은 지난해 308억 달러 규모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신북방정책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토크야예프 대통령은 2년 전 정상 간 합의한 양국 간 경제 협력 프로그램 '프레쉬 윈드'를 통해 교통 인프라 분야의 가시적 협력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4차 산업혁명, 보건의료, 우주 등 신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 국빈 방문 당시 합의한 '프레쉬 윈드' 성과물도 양국은 얼마



문재인 대통령이 토크야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티 외곽순환도로 건설(7.4억 달러 규모), 알마티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6700만 달러 규모) 등의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이행 중에 있다. 외곽순환도로 건설은 2024년 준공 예정에 있으며, 자동차 조립공장은 지난해 10월 완공돼 지난 6월 본격 생산을 개시했다.

두 정상은 또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지식 공유 등 감염병 대응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및 아시아산림협력기구

(AfCo)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기후변화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두 정상은 2007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한·중앙아 협력포럼'이 한국과 중앙아 5개국 간 모범적 다자협력 틀로 정착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다. 중앙아 국가들 간 포괄적 협력 증진에 기여해 온 것을 평가하고,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한·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2022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다양한 기념사업을 개최해 인적·문화적 교류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을 토크야예프 대통령에게 설명하며 카자흐스탄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에 사의를 표했다. 토크야예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지지를 표하며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에 한반도 비핵화에 참고가 되기를 희망했다.

카자흐스탄은 구 소련으로부터 독립하

기 직전인 1991년 8월 세기말타탄스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보유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전량 폐기했다. 자발적 비핵화 모델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카자흐스탄은 2019년 비핵화 포럼 개최를 통해 경험을 공유했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기록관리 ▲무역협력 ▲수자원관리 ▲홍범도 장군 묘역 관리 및 지역개발 ▲경제협력 위원회 설립 등 5개 분야에 걸친 협력 확대 방안을 담은 정부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임석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정상회담 논의 내용을 24가지 조항으로 정리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분야별 협력 강화 외에 ▲주부산 카자흐스탄 총영사관 개설 ▲카자흐스탄의 국제 원자력기구(IAEA) 독트림 가입 조건부 지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공동선발발표에서 "빅 데이터 활용,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비롯한 유망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e-헬스, 민간 협력 사업, 의료 인력·지식·서비스 교류 등 다양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두 정상은 감염병 극복과 예방을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동안의 코로나 협력력을 기반으로 감염병 예방과 관리,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양국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협력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뉴시스

'세상을 바꾸는 정책' 출범

이재명 경기도지사 축하메시지 · 1000여개 정책기조 공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정책전문가 영입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1800여 명 대학교수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포럼 '세상을 바꾸는 정책2022' (이하 세바정2022)이 출범한다.

18일 오전 10시 30분 유튜브 사전제작 영상 송출방식으로 공개될 세바정2022 출범식에는 경제, 노동, 과학, 정치 외교·안보, 산업 여성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전직 장관과 교수 등 정책전문가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민주당 당내 경선 때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공약을 총괄해 온 이한주 가천대 석좌교수, 노무현 정부 출신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문재인 정부 출신인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공동대표를 맡는다.

이 밖에 한완상 전 부총리,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가 고문 및 자문으로 참여하고, 박순성 전 민주정책연구원장,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 김윤태 우석대 교수도 주요 역할을 맡는다.

포럼은 정부 각 부처에 상응하는 20개 분과위원회와 주요 정책별 TF, 특별연구단 등을 포괄해 총 40여 개의 정책생산 연구단위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포럼 참가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전환적 공정성장의 길", "대한민국 대전환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까지 발굴한 1,000여 개의 정책을 12가지 키워드로 집약해 설명하는 프리젠테이션도 공개된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축하메시지,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우원식 국회의원 등이 축하영상을 보낼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진형석 도의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정책자문위원 위촉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지방분권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사업을 선정하는 등의 국가균형발전업무를 추진해오고 있다.

진형석 의원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지방일괄이원법 제정 등으로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초석들이 마련됐고, 지방자치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의 역사에 있어 매우 뜻깊은 올해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내 소상공인 기구 개편 절실'

최영심 도의원

전북도가 도내 소상공인 정책 추진을 위해 기구개편이 절실하다는 주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최영심(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은 17일 "전북도의 소상공인 정책은 주먹구구식"이라며 "타 시도 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세부적으로 역할분담·추진하고 있지만 도는 7명으로 구성된 한 팀으로만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실효성뿐만 아니라 소수 인원의 업무가 과다해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라며 인력확대와 세부업무 분장으로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타 시, 도가 소상공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상반되고 있기 때문이다.

타 시·도의 경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역은 국 단위(서울 부산 등 2곳), 과 단위(대구 인천, 대전 대전 광주 울산, 충남, 경남, 제주 등 9곳) 등이 세부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27명, 부산 31명, 대구 19명, 인천 23명, 광주 13명, 강원 18명, 강원 18명, 충남 11명 등 전북보다 최대 24명이 많은

인력 구성·운영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 7명의 인원으로 소상공인 지원뿐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 전 통시장 유통, SSM, 소비자 보호 등의 업무로 과부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인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영심 의원은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담 인력의 확대와 세부업무 분장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만 코로나19로 각박해진 시장경제에 억눌린 도내 소상공인들의 흥분된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최찬욱 도의원, 주거환경

개선 기여 감사패 받아

전북도의회 최찬욱 의원(전주 10·더불어민주당)이 인후동 산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오정아)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LED 조명 설치와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며, 입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한 공로에 따른 것이다.



최 의원은 평소에도 지역주민들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의정에 담고 있으며, 지역 내 다양한 고충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최찬욱 의원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도의원에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주민들께서 감사패를 주셔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 마련과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중산층 70% 달성... '3중 폭격론'

제조 '정밀'·미래산업 '선제'·서비스 '전방위' 민주 이낙연 전 대표, 경제 공약 관련 성장전략 제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7일 핵심 경제정책 공약인 '중산층 70%' 목표 달성을 위한 성장전략으로 '3중 폭격론'을 내놓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빠른 전환이 요청되기 때문에 군사적전처럼 사활을 걸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성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성장보다 더 나은 중산층 확대 정책도 없다"며 "한국 경제를 성장 추세로 되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까지 추격형 경제로 성장해왔다. 선진국이던 모델을 빨리빨리 따라하면 됐지만 선진국 수준에 오른 지금 우리는 글로벌 선도형 체제를 구축해야만 국민 소득 3만 달러 트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산층 70%를 위한 경제성장 전략 및 실행계획 제 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3중 폭격론은 ▲정밀 폭격 ▲선제 폭격 ▲전방위 폭격 등 세 가지다. 정밀 폭격은 한국의 중추산업인

기존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들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각 산업과 기업 여건에 맞는 정밀한 폭격과 같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선제 폭격은 기술성장을 위한 육성 방안이다. 반도체·미래차·AI·로봇·바이오 등 태동단계에 있는 미래산업의 초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과감한 선제 투자 전략이다.

전방위 폭격은 서비스업 지원방안으로 고용 비중은 매우 높지만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한류를 개발하고 기존 한류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3중 폭격과 함께 ▲산업 생태계 차원의 대안 마련 ▲균형과 조화의 원칙을 지킨 촘촘한 그물망 정책 마련 ▲글로벌 차원에서 10년 미래 변화를 감안한 정책 수립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개혁 등 4대 기본원칙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저는 경제살리기 전쟁의 '워룸(War Room)'에 있다는 각오로 3중 폭격의 상황실장이 되겠다"고 했다. /뉴시스

1회 현금 사용액 100만원 제한... '현금 없는 경제 도입'

정세균 전 총리, 화폐개혁 공약 발표... 디지털화폐 순차 전환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7일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는 화폐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정보통신기술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면 다양한 경제주체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우선 1회 현금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점차적으로 줄여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행이 발행한 불투명체인

의 디지털화폐(CBDC)로의 순차적 전환을 위한 예정이다.

정 전 총리는 '현금 없는 경제'의 장점으로 자금 이동 투명성, 정부의 현금발행 비용 절감, 거래 투명성 제고에 따른 세원 추적 용이 등을 꼽았다.

그는 "화폐개혁은 개인 및 기업의 거래 투명성을 향상시켜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며 "탈세 등 불법적 자금운용을 방지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복지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화폐개혁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